

“쉬었다고 소화기 난사”...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논란



지난 19일 전남광주통합특설시 고흥의 한 어업 사업장 숙소에서 선주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해당 노동자들이 작업 중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고흥어업장 선주 폭행...임금체불 의혹도

굴 양식장 노동착취 적발 이어 또 논란

고흥군 ‘인권침해 제로’ 대책 추진 중 발생

인권단체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해야”

한국에 입국한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전남광주통합특설시 고흥의 한 어업 사업장에서 선주로부터 소화기 분말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고흥에서는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과 중간착취 등이 적발돼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또다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난 7월14일 입국한 베트남 출신 어업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19일 고흥의 한 어업 사업장에서 선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단체는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작업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자 선주가 이들을 협박하고 외딴 섬으로 내보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선주가 숙소까지 찾아가 방 안에 있던 노동자들의 얼굴과 신체를 향해 분말 소화기를 뿌렸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피해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통발을 이용한 문어잡이 외에 꽃게잡이 그물 정비 작업에도 동원됐으며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하고 임금도 체불됐다고 단체는 밝혔다.

고흥지역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노동·인권 문제는 앞서서도 불거졌다.

지난 2월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의혹이 제기됐으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는 계절근로자 26명의 임금 3천170만원 체불과 브로커의 중간착취 등이 적발됐다. 고흥지역 취약사업장 5곳을 추가 점검한 결과에서도 모두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지난 15일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사업주 2명과 브로커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흥군도 잇따른 문제를 막겠다며 지난 2월 ‘인권침해·무단이탈 고흥 제로(ZERO)’를 선언하고 4대 분야 15개 계절근로자 관리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임금과 인권보호, 숙소 상태 등을 토대로 사업장 위험도를 구분해 관리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나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는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추진 중 별도의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또다시 폭행과 임금체불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주인권단체는 이번 사건 역시 개별 사업주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 고용허가제 아래에서는 노동자가 폭력이나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겪더라도 사업장을 자유롭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 당국에 폭행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해당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 제한, 피해 노동자들의 신속한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다. 정부에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과 고용허가제 개선을 촉구했다.

단체는 22일 오전 11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흥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련 민원이나 신고 접수된 사실이 없어 해당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처음 듣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윤찬용 기자

특수단 “국수본 분리수사 정당”...검찰과 판단 엇갈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경위를 조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시는 정당했으며,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은 광주 광산경찰서 지휘부에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검찰이 같은 지시를 부당한 수사지휘로 보고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과 엇갈린 판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 규명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21일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 A(58)씨와 전 형사과장 B(55)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 강력팀원 D(41)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했다. 앞서 전 강력팀장 C(58)씨는 지난 7월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다.

특수단은 당시 광산서 수사팀이 범행 영상과 외국인 여성 스토킹 사건 등 장윤기의 성적 목적을 의심한 정황을 다수 확보하고도 조사 범위를 제한하거나 수사보고서 내용을 수정·제외했다고 봤다.

해당 배경에는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광산서 지휘부의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부실수사 책임자 광산서 지휘부 지목

“스토킹 신고 부실대응 파장 우려” 판단

분리 지시 이유엔 ‘2차 피해 방지’ 목적

수사지휘 미흡...“형사책임 묻긴 어려워”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광산서는 장윤기의 범행 이틀 전인 5월3일 다른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고도 현장 종결한 뒤 사후콜백과 전수합동조사 등을 제때 하지 않았다.

광산서 측이 장윤기의 강간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병합수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광산서장이 인론 대응 창구를 형사과장으로 일원화한 점을 들어, 관련 사건까지 형사과가 맡게 해 스토킹 이후 신고 처리 과정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결

론 내렸다. 특수단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당시 살인과 강간·스토킹 사건을 나눠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사건을 최종별로 나눠 전문 부서가 수사하도록 한 취지였다고 판단했다.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사건을 나눠 맡더라도 수사 내용을 공유하도록 한 만큼 강간살인 혐의를 규명하는 데도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실제 국수본과 광주청은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성적 목적을 확인하도록 여러 차례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분리수사 지시와 별개로 국수본의 구체적인 수사지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오 단장은 “국수본은 주로 행정보고를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수사지휘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다만 상급기관이 일선의 수사 판단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부당한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어 국수본 관계자들에게 부실수사의 형사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자결제대행사 해킹...3억5천 빼돌린 일당 검거

명절 연휴 서버 교체 취약점 노려 범행

가상자산 이용한 범죄수익 세탁 정황도

전자결제대행(PG) 업체 서버의 취약점을 노려 탈취한 신용카드 정보로 부정 결제를 일으킨 뒤 가맹점 정산계좌를 바꿔 3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컴퓨터등사용사고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8명을 검거하고 이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A씨와 B씨는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할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피해 PG사의 가맹점주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범행 가능 여부를 시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2월15일부터 20일 명절 연휴 기간 PG사의 가맹점주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 당시 서버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가맹점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A씨에게서 받은 카드 정보로 여러 건의 결제 승인을 발생시킨 것으로 경찰을 보고 있다.

이들은 이후 가맹점에 지급될 정산계좌를 대포계좌로 변경해 PG사가 지급한 정산금 약 3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공범 6명은 범죄수익 인출과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세탁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명절 기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 승인 문자를 받은 여수·순천지역 주민 19명의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PG사 서버 접속 로그와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최초 서버 침입 경로와 카드 부정 승인, 정산계좌 변경, 범죄수익 인출 및 가상자산 세탁 과정을 확인한 후 피의자들을 추적·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카드정보가 유출된 이용자 약 150명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카드 이용정지와 재발급을 안내하고, 모든 신용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승인 정지를 요청해 추가 피해도 예방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